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1월

전문가 기고

순환경제의 의미와 과제

주요 이슈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ESG 동향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주요 통계

순환경제의 의미와 과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세천 교수

최근 2022년 12월 28일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에 시행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법률의 전면 개정을 필요로 한 점만 보아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자원순환 분야의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환경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순환경제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탄소중립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할 선택적 과제가 아닌 필수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자원순환의 중요성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으며, 순환경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자원의 순환이 단순히 규제와 제도에 의존하여 폐기물의 관리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진행되었다면, 순환경제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기존의 선형구조를 원형구조로 만드는 순환경제의 구현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물의 관리 등 각 경제 주체별로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 또한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과 이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의 경우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꾸준히 수정·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환경제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등의 서로 다른 주체들의 활동이 원으로 무한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한 주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선으로 회귀할 밖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구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자원 사용의 출발점이 생산부터라는 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이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경제 주체 중에서도 어쩌면 생산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선도적으로 자원순환형 제품을 설계·생산하고, 또한 생산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순환경제의 구현을 위한 주요 출발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ESG 경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이슈임에는 틀림없으나, 단순히 탄소중립 또는 환경적인 측면만을 위하여 추진된다고 보면, 이는 너무 순진한 접근일 수도 있다.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들, 실제로 플라스틱 생산에 있어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과 같은 규제들의 경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산업의 현황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이에 대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으면 매우 큰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이미 상당 부분 기술이 준비되어 있거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들에 의하여 순환경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국제화될 경우, 만약 국내 산업이 이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국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약화는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각 산업의 변화속도를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극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체제에 있어서 순환경제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오히려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산업경쟁이 중장거리 육상경기였다면 현재 대부분의 산업경쟁은 단거리 육상경기와도 같다. 과거의 경우 다소 출발이 늦더라도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출발이 늦을 경우,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곤 한다. 따라서 만약 순환경제로의 전

환을 위하여 각 기업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의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과 고용의 창출 또한 기대할 수도 있다. 현재 산업의 국제경쟁은 이미 공간적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으며, 또한 점차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 규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순환경제의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만 있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신산업 및 고용 창출과 같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의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연구위원

공정전환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공정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부터 재취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속적인 체계와 모든 이해관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① 공정전환의 의미와 중요성

공정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전환은 1980년대 미국에서 환경규제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EU는 공정전환을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동자, 기업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EU의 공정전환 메커니즘

EU는 탄소중립 시행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아래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동 체계하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산업,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3가지 자금 지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는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복원, 직무재교육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 InvestEU 체계에서는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공정전환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셋째로 공공부문 대출 기구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난방시설처럼 상업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공정전환 메커니즘



EU는 공정전환 플랫폼을 운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유인을 높이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금 신청 양식 및 배분 규정 등을 제공하여 참여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③ 국내 동향 및 과제

국내도 공정전환을 탄소중립의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법에 공정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기후대응기금 2.5조원 중에 2,038억원을 공정전환에 할당하였으며, 동 기금을 통해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공정전환 지원 정책은 이제 초기 시작단계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2022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의 경우 대상기업 1,337개사 중 15개사(9월말 기준)만 신청하는 등 신청기업이 저조하여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공정전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부터 재취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속적인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공정전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모든 소요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EU의 공정전환 메커니즘처럼 자금 지원 대상에 맞춰서 재원조달을 다양하게 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공공자금이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펀드 등을 설립하여 재원의 규모를 확대해 가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구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개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대상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	
내용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피보험자수의 50% 한도 (최대 100명) 내로 최대 3억원 지원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자료 : 국회예산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박현준 연구원

환경부는 '22년 12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공통분야·원전분야·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녹색분류체계는 '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향후 녹색 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 방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2.4~11월까지 시범사업 통해 기존 녹색분류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2.12월에 발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개정안에는 ①공통분야, ②원전, ③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환경개선에 기여하는 67개의 경제활동(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7개의 과도기적 경제활동(전환부문)으로 분류된다.('22.12월 기준)

개정안에는 '공통분야'를 신설하여 '연구·개발·실증 및 혁신 품목에 대한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대출·투자·구매 등)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원전분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이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내용도 금번 개정안에 새로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관련 활동이 녹색부문으로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이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기후 예측 기술혁신 및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 위해 비용·교육·홍보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 원칙 및 판단기준

녹색분류체계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 목표중 하나 이상 달성에 기여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과정에서 다른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인권·노동·안전·반부패·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녹색활동 적합성 판단기준	
활동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적합한지 판단
인정기준	6대 환경 목표중 하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인지 판단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피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노동·안전·반부패·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ESG 통계 지표

2023년 1월 2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151	162	172	183	186	188	199	203	201	200	212	212
사회적채권	794	820	835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지속가능채권	230	233	237	246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녹색채권	156	168	173	183	185	186	191	194	193	193	200	200
사회적채권	1,273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지속가능채권	175	181	182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 ESG 평가

'22년 하반기 ESG 종합 등급 부여 현황(SUSTINVEST 등급 자료 기준)

(단위 : 개사)

구분		AA	A	BB	B	합계
기업수	규모등급*	78	193	310	214	795
	전체등급**	74	150	193	260	677

* 규모등급: 자산 규모별 ESG 차등평가로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등급 기준

** 전체등급: 모든 기업에 동일한 절대기준을 토대로 ESG평가한 등급 기준

자료 : SUSTINVEST

3. 기타 통계

최근 5년간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 비교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장사 수	253	250	266	274	288
상장사 전체 이사 수	1,570	1,578	1,696	1,745	1,846
사외이사 수	787	810	864	890	954
회사당 평균 사외이사 수	3.11	3.24	3.25	3.25	3.31
사외이사 비중	50.1	51.3	50.9	51.0	51.7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국내 기후금융 현황 및 과제

3월 | 지속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4월 |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5월 | RE100 추진 현황과 과제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8월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9월 |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10월 |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11월 |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연구위원
T. (02)6050-3144 | E. khkim1206@korcham.net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박현준 연구위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

ESG 통계 지표

박현준 연구위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